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원 동북댐 새댐 짓는다

호남 반도체 주요 용수원으로 활용될 동북댐 확장 사업이 기존 댐의 높이를 올리는 ‘증고’가 아닌 새로 건설하는 ‘증축’ 방식으로 추진된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댐의 높이를 약 15m 높이는 증고 방식이 안정성 문제 등으로 어렵다고 판단. 새 댐을 짓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검토한 결과, 기존 댐에 그대로 15m 높이의 구조물을 올려 높이가 44m에서 59m로 높아지면 늘어난 수량을 구조물이 견디

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댐에서 하류 쪽으로 200m 지점에 더 많은 수량을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터 튼튼히 한 새 구조물을 짓기로 계획을 바꿨다.

새 댐 높이는 현재 댐보다 높은 59m가 되고, 동북댐의 저수용량은 9950만에서 1억t 이상이 늘어 2억t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댐을 지으면서 기존 댐은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상류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임시로 만들어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게 할 계획이다.

중고서 증축으로 변경…기존 구조물 수압 안정성 우려
하류 200m에 새 댐… 내년 하반기 착공, 2030년 완공
저수용량 2억t 이상으로 늘어…266가구 수물 대책쟁점

기존 댐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석축 등은 새 댐 건설에 재활용한다.

기후부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에 호남 반도체가 들어설

2030년 완공해 반도체 용수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북댐 30만t, 주암·장흥댐 15만t, 보성강댐 10만t, 나주댐 10만t 등 65만t의 용수를 2030년까지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 상수원 역할을 하는 동북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해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댐 증축에 따른 상류

지역 수물 피해나 주민 이주 대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댐 수위가 15m 상승할 경우 상류 지역인 화순·담양군 일대 8~10개 마을, 266가구가 수몰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동북댐 확장은 기후변화로 강수 편차가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산업용수와 더불어 광주의 생활용수를 함께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북댐 증축으로 인한 수물 피해는 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한빛

李대통령-트럼프 정상회담…북미대화·핵잠·조선·전작권 논의

대미투자 논의 진전에 환영…트럼프, 北과 대화의지 재확인
워싱턴서 후속 논의하기로…李, 미국·멕시코 순방 끝 귀국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이번 정상외교 일정을 돌아보면서 구체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 도착해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다자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같은 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핵잠수함 연료·농축재처리·조선업 협력 문제, 전작권전환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원자력협력 문제 등 안보협상 이슈를 대거 거론했다. 이에 더해 전작권전환체권 전환의 조속한 마무리를 원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기여를 해달

라는 기대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한미 정상은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워싱턴에서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멕시코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25일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이 7년만에 타결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연합뉴스

▶1면 ‘추석 민심’서 계속

신정훈 의원은 “통합특별시 초기 행정운영의 미숙함으로 혼란과 갈등, 분열 양상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컸다. 특히 목포와 서남권의 타격이 커 치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을 주도했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심각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과 주청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민 시장이 잘해야 하는데 만족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박균택 의원(광산)은 “일부 지역민들로부터 ‘민 시장이 좀 아무지게 치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힘든 경제상황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문금주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지 전수소사로 논·밭의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 토지를 강제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돼 있다”며 “농민들도 행정통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확대하고 지자체간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특별시 정부부시장, 내달 5일부터 인사청문

후보별 특위 구성…조직개편 반대 속 날선 검증 이뤄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정무직 부시장 후보들이 인사청문대에 오르는 가운데 권역별 배치를 둘러싼 의회 내부의 복잡 한 기류가 형성되면서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된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에 따르면 배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와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다음달 5일부터 실시한다.

의회는 각각 15명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5일 백 후보자, 6일 윤 후보자를 각각 청문한다. 검증이 부족할 경우 7일 오전 본회의 이후 오후에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가 질의할 예정이다.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일 각각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운영방향과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인사청문에서는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통합시정에 대한 비전과 정책역량, 공

직관과 자질, 도덕성과 준법성 등을 중심으로 후보자가 정무직 부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배승주 후보자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예산·자치분권·조직·관광·건설·에너지산업·농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를, 윤난실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민주권·청년·교육·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정책 이해도와 직무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시민추천 공모 당시 지방직 부시장의 분장사무와 공모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집행부가 조직개편으로 부시장 직제를 손질, 후보자의 역할과 배치가 달라진 만큼 공모 당시와 다른 직위에 제공모 없 이 같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한 절차의 적절성과 변경된 직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주요 쟁점이 될 거스로 보인다.

의회 내부의 조직개편 반대 기류도 청문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지난 18일 조직개편안은 재석 89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35명, 기권 8명으로 과반을 한 표 차이 통과했다.

당시 조직개편에 비판적이었던 의원들이 청문특위에 포함되면 부시장 직무 변경과 권역별 기능 배분 등을 놓고 강한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산업경제부시장의 국가직 전환과 동부청사 배치 과정에서 제기된 서부권 균형 문제에 국립대의 등 권역 갈등 현안까지 맞물리면서 날 선 질의도 예상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검증 결과를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광주특별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 행정조직의 조속한 안착과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부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면밀히 검증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사청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 첫 기조실장에 이병철

내달 7일 조직 개편 맞춰 직위 부여 받을 듯

인사혁신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장에 이병철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사진)을 28일자로 전보 발령했다. 이 신임 실장은 전남광주 나주 출신으로 광주상고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자치부 서기관을 거쳐 경기도 아동청소년과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국립목포대 사무국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이 실장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 행정통합 이전 주시에서 기조실장으로 일했다.

통합시는 10월 7일 조직 개편에 맞춰 이 실장의 직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고광원 통합시 부시장은 정년을 맞아 오는 30일 자로 의원면직이 된다.

고 부시장은 2024년 1월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취임했으며, 지난 7월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안전민생부시장으로 임명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효석(2급) 김기홍(2급) 이상배(2급) 강은순(3급) 김승희(3급)



배용석(3급) 윤미라(3급) 이길용(3급) 이병철(3급) 전창우(3급)

강효석·김기홍·이상배 이사관 승진 전남광주특별시, 첫 간부급 승진인사

2급 3명·3급 7명·4급 24명 등 34명 승진 의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강효석 행정통합추진단장과 김기홍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장,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을 2급 이사관 승진자로 결정하는 등 출범 이후 첫 간부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인사 17명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2급 3명과 3급 7명, 4급 24명 등 모두 34명의 승진을 의결했다.

이번 인사는 10월7일 시행되는 첫 조직개편을 앞두고 새 행정체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직위를 채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위 간부 인사는 승진 요인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부를 내년으로 넘겼다. 시는 2·3급 승진 대상 직위 5개 가운데 3개 직위만 우선 승진 의결하고, 나머지 2개 직위는 조직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 1월 추가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2급 승진자인 강효석 행정통합추진단장은 문화융성국장과 감사관, 농축산식품국장 등을 거치며 문화·산업·농정 분야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남도영화제 개최,

국립의병역사박물관 개관을 비롯해 이차전지 기업 투자 유치와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기홍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장은 관공체육국장과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AI컴퓨팅센터와 오픈AI-SK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이끌며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 확충에 기여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도시재생국장과 전략산업국장 등을 거치며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과 대우위니아 유치, 에너지밸리·첨단3지구 조성 등 산업·도시개발 현안을 담당했다.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자는 강은순 민주보훈과장, 김승희 행정지원과장, 윤미라 전략추진단장, 이길용 문화정책관, 이병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략사업부장,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 배용석(파견) 등 총 7명이다. 이밖에 4급 서기관 승진자도 24명에 달한다.

시는 직무 수행 능력과 리더십,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성과 중심의 인사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양동민 기자